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56-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더 이상 비울 수 없는 쓰레기통,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대국민 인지도와 인식 그리고 수용성 제고 방안

2025. 11. 19.

담당자 차동규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0136

e-mail | dkcha@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비울 수 없는 쓰레기통,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대국민 인지도와 인식 그리고 수용성 제고 방안

여론 속의

여輿論論

주요 결과

- 1978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는 시작됐다. 2025년 현재까지 고리·월성·한빛·한울 등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2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 시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 중이며, 국내 전력 생산량의 약 30%를 담당,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했다.
-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지속될수록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또한 끊임없이 쌓여가고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는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임시 저장 공간마저도 일부 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 전후 저장 한계에 도달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25년 9월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으나, 앞으로 헤쳐 나아가 할 길은 멀기만 하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8월 22일~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인식 그리고 처리 시설과 관련한 대국민 수용성 및 접근성 제고 방안까지 알아보았다.
- 응답자 10명 중 약 4명(39%)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중 절반(55%)만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구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 10명 중 약 2명(16%)으로 낮은 수준이다.
- 더욱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임시 저장 형태 또한 2030년을 전후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 10명 중 3명(34%)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 앞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알고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에 그쳤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원자력에 관한 정부의 정보 제공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77%) 이상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원자력에 관한 대국민 소통 방안으로 ‘공론조사 등 시민참여 절차 강화’ 응답이 39%로 가장 높았다. 지속적인 정부의 대국민 소통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지도 및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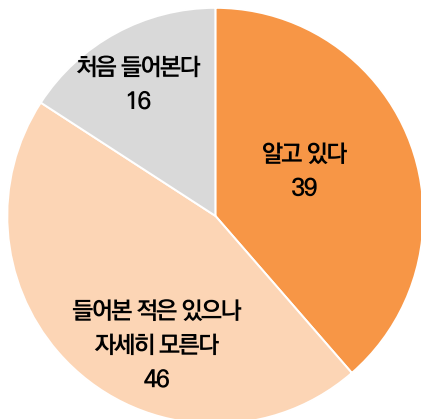
국민 10명 중 4명(39%)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에 대해 인지 정확한 개념을 아는 응답자는 그중 절반에 그쳐

응답자 10명 중 약 4명(39%)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중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구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55%) 수준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저연령층(63%)이 타연령층 대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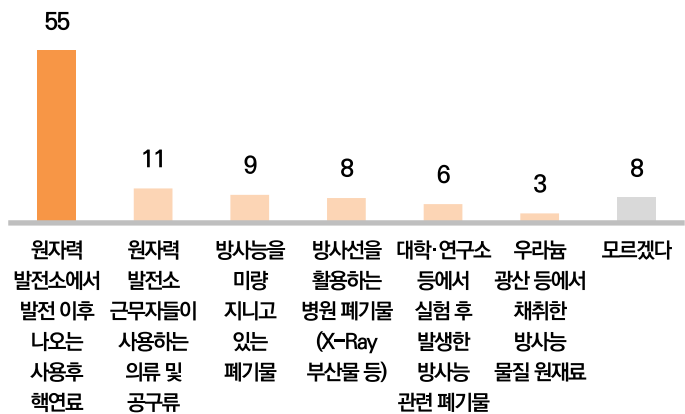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 '알고 있다' 39%, '처음 들어본다' 16%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 중,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55%

(단위: %)

인지도



인지 수준



질문: 인지도 - 아래 개념들에 대해 알고 계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지 수준 - 귀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인지도 문항의 '알고 있다'는 '정의와 내용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인지도 - 1,000명

인지 수준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 '알고 있다' 응답한 389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단위: %)

18-39세에서 타연령층 대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비율 높은 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 인지자	사례수 (명)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 이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의류 및 공구류	방사능을 미량 지니고 있는 폐기물	방사선을 활용 하는 병원 폐기물(X-Ray 부산물 등)	대학·연구소 등에서 실험 후 발생한 방사능 관련 폐기물	우라늄 광산 등에서 채취한 방사능 물질 원재료	모르겠다
전체	(389)	55	11	9	8	6	3	8
연령								
18-39세	(112)	63	8	7	4	7	3	8
40-59세	(128)	50	13	7	9	7	2	11
60세 이상	(149)	54	12	11	10	4	4	6

질문: 귀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 '알고 있다' 응답한 389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에 대한 주요 인지 경로는 TV(지상파, 케이블 등)가 34%로 가장 높으며, 온라인 웹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가 20%로 그 뒤를 잇는다. 정보 취득 경로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TV, 30대 이하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정보 취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단위: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 인지 경로, TV가 34%로 가장 높으며
온라인 웹사이트(20%), 유튜브(15%) 등의 순



질문: 귀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어디에서 접하셨습니까?

응답자 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 '알고 있다' 응답한 389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TV, 18-39세 저연령층은 유튜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 인지한다는 응답 타 연령대 대비 높아

(단위: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 인지자		사례수 (명)	TV (지상파, 케이블 등)	온라인 웹사이트 (네이버, 다음, 구글 뉴스 등)	유튜브	정부 발표 및 홍보물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리플렛, 현수막 등)	종이 신문	SNS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등)	그 외 다른 매체	모르겠다
전체		(389)	34	20	15	11	5	2	5	7
연령										
18-39세	(112)		18	22	22	10	7	2	9	10
40-59세	(128)		38	20	19	7	3	2	4	7
60세 이상	(149)		43	18	7	15	6	2	4	5

질문: 귀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어디에서 접하셨습니까?

응답자 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개념 '알고 있다' 응답한 389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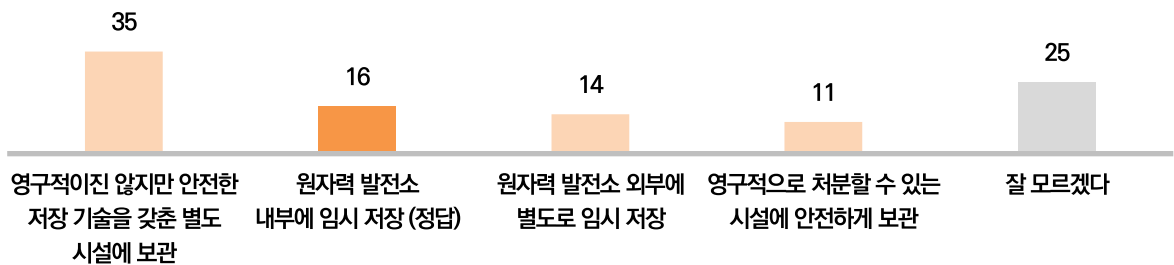
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현황 이해 정도

현재 국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형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응답자는 10명 중 2명 미만(16%)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처럼, 이를 처리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인지도 또한 낮다. 국민 10명 중 2명 미만(16%)이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인지하며, '영구적이진 않지만 안전한 저장 기술을 갖춘 별도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35%로 가장 많다.

(단위: %)

현재 국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16%



질문: 귀하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어떤 형태로 저장 및 처리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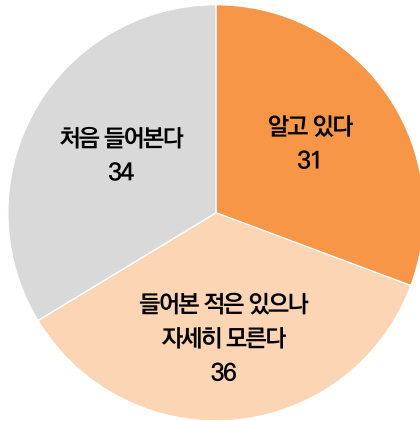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국민 10명 중 3명(31%)만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 저장 시설 포화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

더욱이 2030년을 전후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한 많지 않다. 응답자 10명 중 약 3명(31%)만이 이를 알고 있으며, 이를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 또한 10명 중 약 3명(34%)이다. 특히 3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 해당 사실을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46%로 타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포화 상황 '알고 있다' 31%, '처음 들어본다' 34%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포화 여부, 18~39세 저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 낮아

(단위: %)



	사례수 (명)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	처음 들어본다
전체	(1,000)	31	36	34
연령				
18~39세	(301)	28	26	46
40~59세	(367)	27	38	35
60세 이상	(332)	37	42	21

질문: 귀하는 2030년부터 국내 원자력 발전소별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비고: 알고 있다(해당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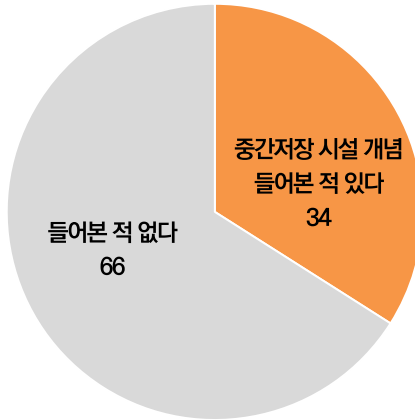
중간 저장 시설 단계에 대한 인지도는 30%대,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는 '안전성'에 대한 요구 높아

임시 저장 시설 포화에 따라 이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영구 처분 시설'을 바로 건립하면 좋겠지만, 영구 처분 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최소 3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영구 처분 시설 이전에 중간 저장 시설 건립이 필요한데, 응답자 3명 중 1명(34%)만이 '중간 저장 시설'이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있다.

중간 저장 시설 건립과 관련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검증 등 안전성 확보'가 46%로 가장 높으며, 부지 선정부터 운영 과정까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29%)가 그 뒤를 잇는다.

중간 저장 시설 개념 인지 여부 34%, 비인지 66%

(단위: %)



질문: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 시설 건립 이전에 중간저장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하는 중간저장 시설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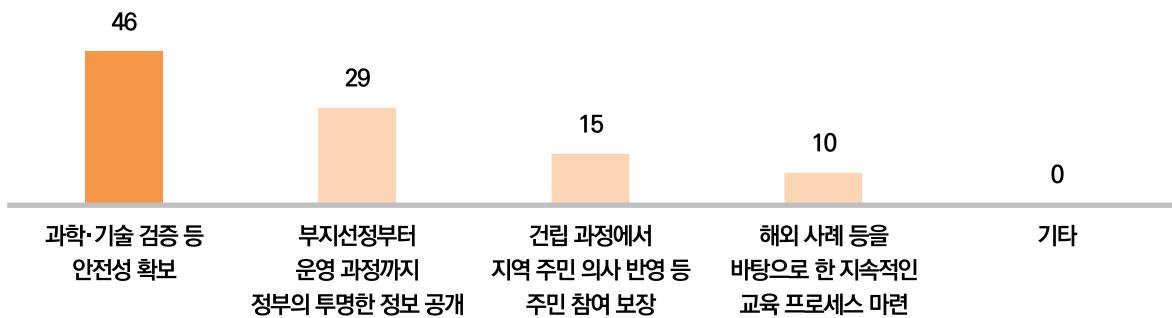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중간 저장 시설과 관련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안전성 확보' 응답이 46%로 가장 높아

(단위: %)



질문: 귀하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지도 및 소통 방안

**2025년 9월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지도는 14%로 낮아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77%)이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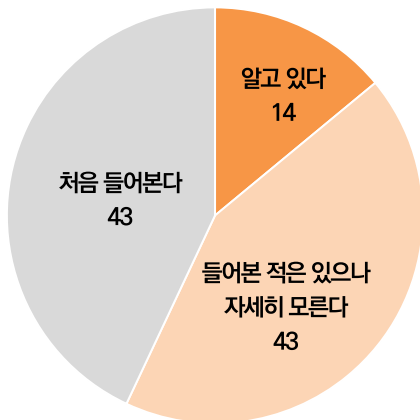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과 관련한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과거부터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2월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하며, 올해 9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특별법 인지도는 14%로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특별법에 대한 주요 인지 경로로는 TV(지상파, 케이블 등)가 34%로 가장 높으며, 온라인 웹사이트(19%), 정부 발표 및 홍보물(18%) 등의 순이다. 원전 소재지(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타지역 대비 정부 발표 및 홍보물(34%)로 특별법을 접하게 된 경우가 많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알고 있다' 14%, '처음 들어본다' 43%
인지 경로는 TV가 34%로 가장 높으며 온라인 웹사이트(19%), 정부 발표 및 홍보물(18%) 등의 순

(단위: %)

인지도



인지 경로



질문: 인지도 - 귀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알고 계십니까?

인지 경로 - 귀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어디에서 접하셨습니다?

비고: 인지도 문항의 '알고 있다'는 '해당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인지도 - 1,000명

인지 경로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알고 있다' 응답한 141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원전 소재지역 거주 응답자들은 '정부 발표 및 홍보물'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인지하는 비율(34%)이 타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

(단위: %)

고준위 특별법 인지자	사례수 (명)	TV	온라인 웹사이트	정부 발표 및 홍보물	유튜브	종이 신문	SNS	그 외 다른 매체	모르겠다
전체	(141)	34	19	18	15	6	4	3	1
거주지역									
원전 소재지 외	(104)	33	22	13	16	6	5	3	2
원전 소재지	(37)	36	11	34	11	5	0	3	0

질문: 귀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어디에서 접하셨습니까?

비고: 원전 소재지=부산,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응답자 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알고 있다' 응답한 14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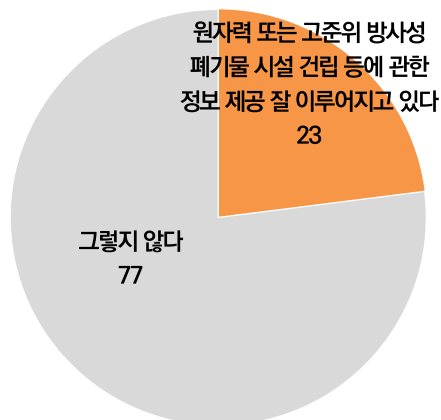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8.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특별법의 낮은 인지도에 이어 응답자 4명 중 3명(77%)은 현재 원자력 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설 건립 등에 관한 정부의 정보 제공에 불만족한다. 향후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49%)가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한 콘텐츠 제공 방식을 선호한다. 다만, 2·30대에서는 SNS 및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한 방식을 선호해, 40세 이상 응답자의 절반 이상(50%, 60%)이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한 콘텐츠 제공 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원자력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설 건립 등에 관한 정부의 정보 제공 77%가 불만족

(단위: %)



질문: 귀하는 현재 원자력 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설 건립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국민들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그렇다(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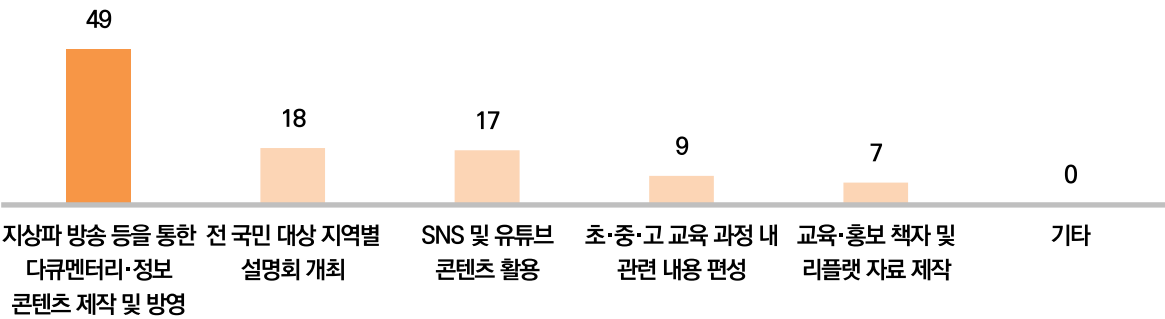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원자력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방안,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방영 49% 가장 높아

(단위: %)



18~39세 저연령층에서는 SNS 및 유튜브 활용, 40세 이상은 지상파 방송 콘텐츠 선호

(단위: %)

사례수 (명)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한 다큐멘터리· 정보 콘텐츠 제작 및 방영	전 국민 대상 지역별 설명회 개최	SNS 및 유튜브 콘텐츠 활용	초·중·고 교육 과정 내 관련 내용 편성	교육·홍보 책자 및 리플렛 자료 제작	기타
전체	(1000)	49	18	17	9	7	0
연령							
18~39세	(301)	34	12	35	12	6	0
40~59세	(367)	50	21	12	8	9	0
60세 이상	(332)	60	20	6	7	6	0

질문: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귀하 또는 주변 사람들이 원자력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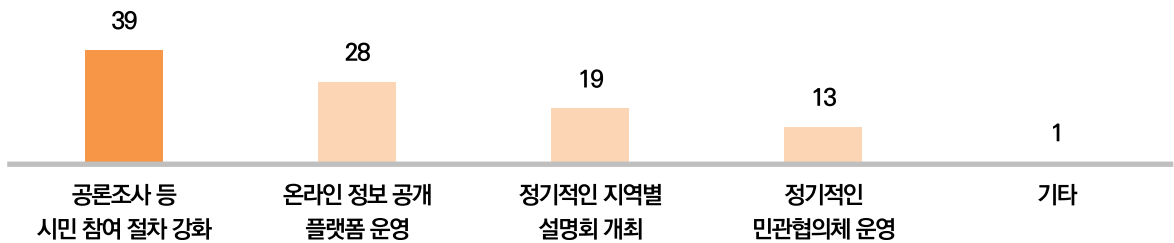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8. 22. ~ 25.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홍보는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한 콘텐츠 제공 선호도 높지만 세대별 차이 존재, ‘대국민 소통 방안’은 ‘공론조사’ 등 시민 참여 절차 강화 방식 선호 높아

향후 가장 선호하는 원자력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대국민 소통 방안으로 공론조사 등 시민 참여 절차 강화 응답이 39%로 가장 높다. 이어서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 운영(28%), 정기적인 지역별 설명회 개최(19%) 응답 등이 그 뒤를 잇는다.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공론조사 등 시민 참여 절차 강화 응답(47%)이, 3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는 온라인 공개 플랫폼 운영(41%) 응답이 높은 편이다. 결론적으로는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공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 참여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원자력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대국민 소통 방안 선호도
공론조사 등 시민 참여 절차 강화 응답이 39%로 가장 높고,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 운영(28%) 등이 그 뒤를 이어

(단위: %)



30대 이하는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 60세 이상은 공론조사 선호도 높아

(단위: %)

	사례수 (명)	공론조사 등 시민 참여 절차 강화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 운영	정기적인 지역별 설명회 개최	정기적인 민관협의체 운영	기타
전체	(1,000)	39	28	19	13	1
연령						
18~39세	(301)	30	41	16	12	1
40~59세	(367)	40	24	21	14	0
60세 이상	(332)	47	22	19	12	1

질문: 향후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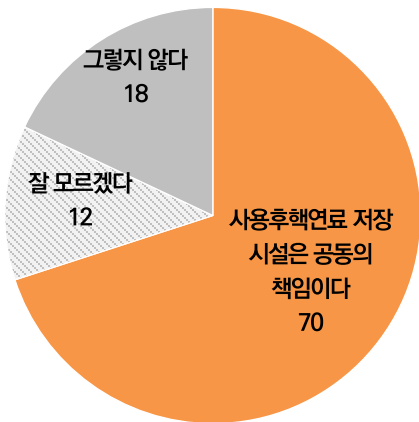
원자력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수용성 및 보상 방안

**특별법에서 명시된 절차로 부지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수용하겠다 71%,
하지만 내 거주지 인근이라면 수용도 47%로 하락**

특별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국민 10명 중 7명(71%)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인의 거주지역 내 건립이 되는 경우 47%만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70%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과는 다른 결과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은
공동의 책임이다, 70%가 동의

(단위: %)



질문: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한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건립은 국민 모두에게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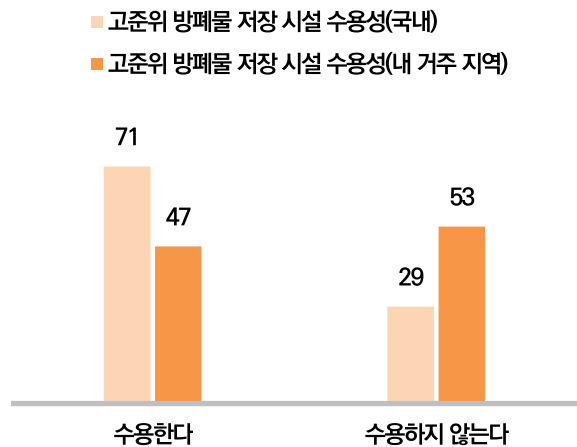
비고: 그렇다(매우 그렇다 + 다소 그런 편이다) /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적법절차에 의한 저장 시설 건립 수용성 71%,
적법절차라 하더라도, 거주 지역 건립 수용성은 47%

(단위: %)



질문: 국내 - 귀하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지선정 절차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를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거주 지역 - 만약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귀하의
거주지역'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이 건립된다면 이를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비고: 그렇다(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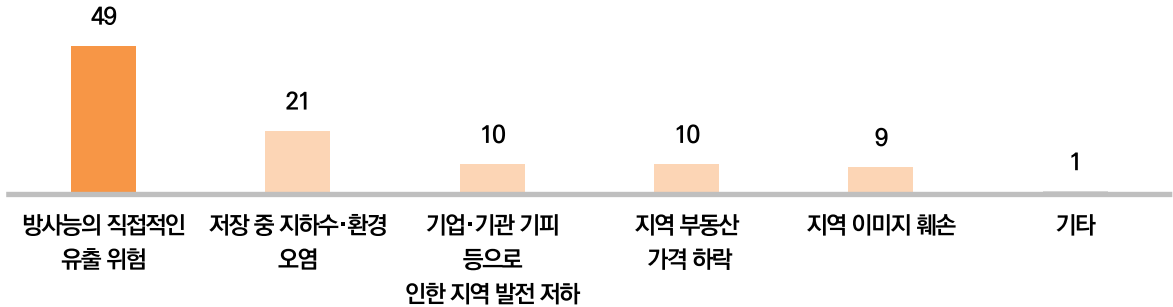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거주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선정 시 가장 우려되는 이유로는 방사능의 직접적인 유출 위험이 49%로 가장 높으며, 저장 중 지하수·환경 오염(21%) 등이 그 뒤를 잇는다.

거주지역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건립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방사능의 직접적인 유출 위험' 49%

(단위: %)



질문: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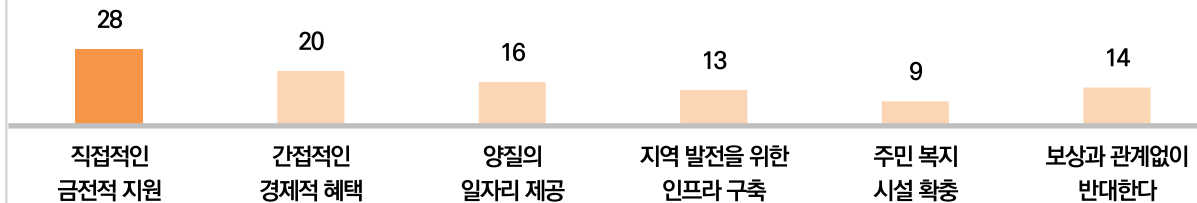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보상 방안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희망 비율이 28%로 가장 높으며, 보상 주체로는 개인과 지자체에 동등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높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건립에 따른 보상 방안으로는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28%),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20%), 양질의 일자리 제공(16%) 등의 순이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주체로는 '개인 및 지자체에게 동등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개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건립에 따른 보상 선호 방식,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28%로 가장 높아 이어서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 20%, 양질의 일자리 제공 16% 등의 순

(단위: %)



질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이 건립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제공됩니다. 어떤 형태의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비고: 1순위 응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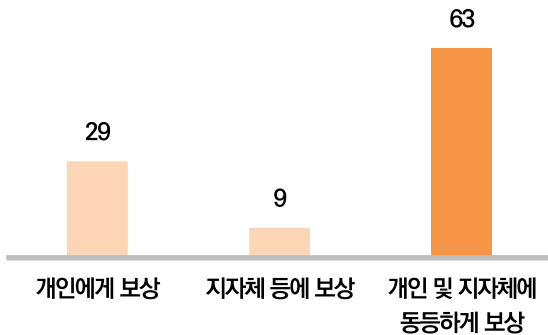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건립에 따른 보상 주체 '개인 및 지자체 동등 보상' 63%로 가장 높아 연령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보상'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단위: %)



	사례수 (명)	개인에게 보상	지자체 등에 보상	개인 및 지자체 등에 동등하게 보상
전체	(1,000)	29	9	63
연령				
18-39세	(301)	36 ↑	10	54 ↓
40-59세	(367)	29	7	63
60세 이상	(332)	21 ↓	10	69 ↑

질문: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건립에 따른 보상은 개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8.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아직까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보 제공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처리 시설 건립과 관련한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일부 존재하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에 난항 또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국가, 지자체, 관련 기관, 지역 주민 등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전 국가적인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신중하고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7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6,056명, 조사참여 1,86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8%, 참여대비 53.7%)
조사일시	• 2025년 8월 22일 ~ 8월 25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